

6. 사랑의 매, 학생 체벌

■ 핵심용어(용어사전)

- * 체벌 :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함으로써 학생으로 하여금 학업에 더욱 정진케 하고, 그릇된 행동을 수정하도록 하기 위한 행'
- * 학생 징계 : 학교에서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에게 과하는 제재
- * 정학 : 학생의 학교 시설 이용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징계처분
- * 퇴학 : 학생에 대하여 학생으로서의 신분관계를 소멸시키는 처분
- * 근신 : 잘못된 것에 대하여 뉘우치고 일정한 기간 회개하는 처분

■ 사례 :

<사건의 개요>

중학교교사 A는 수업시간에 학생B를 꾸짖는데 같은 반 학생 C가 자신을 비난하는 듯한 말을 했다는 이유로 교단으로 불러내 손바닥으로 C의 눈 부위를 때려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이와 관련하여 A는 법원으로부터 C에 대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벌금 5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되었다.

위와 같이 C가 A에게 맞아 다치자, C의 아버지 D는 A에게 항의하며 1,5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형사고소 하겠다고 겁을 주어 A를 협박하고, C의 어머니 E는 합의금으로 1,500만 원을 요구하며 위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하고 인터넷에 띄우겠다고 말하여 A를 협박하였다.

이에 A는 D 및 E를 검찰청에 고소하였는데, D 및 E는 검사로부터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초범이고 사건 경위 및 정상에 참작할 점이 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이에 C, D, E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자 A도 반소로서 D 및 E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

교사의 학생 체벌행위와 관련하여 학생이 교사에게 무례하게 행동하여 교사가 학생의 잘못된 행동을 교정하려는 목적으로 행한 체벌이 징계권의 행사로서 정당행위가 되는지 여부

<사건의 결말>

A는 상해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C에게 4,381,700원(치료비 381,700원+위자료 400만 원), D 및 E에게 각 100만 원(위자료)을 지급하라는 판결 및 D 및 E는 A에게 협박에 행위로 인한 위자료 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다.

<전문가의 의견>

위 사례에서 교사 A는 C에 대한 체벌행위는 학생C가 무례하게 행동하여 C의의 잘못된 행동을 교정하려는 목적으로 행한 것이므로,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

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학생에 대한 체벌이 징계권의 행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체벌이 교육상 필요가 있고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할 수 없어 부득이한 경우이어야만 하고, 그와 같은 경우에도 그 체벌의 방법과 정도에는 사회관념상 비난받지 아니할 객관적 타당성이 있어야 할 것인데, 가령 A의 주장과 같이 학생C가 교사 A에게 무례하게 행동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것이 징계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거나,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 이를 교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A가 C의 눈 부위를 때려 상해를 입힌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체벌의 방법과 정도에 있어서도 사회관념상 객관적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A의 정당한 징계권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본 학습>

1. 체벌의 개념

체벌이란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함으로써 학생으로 하여금 학업에 더욱 정진케 하고, 그릇된 행동을 수정하도록 하기 위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2. 체벌의 유형

체벌의 유형을 정리해보면

- (1) 신체에 대한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징계, 때리고 발로 차는 것 또는 육체적인 고통을 주는 행위
- (2) 용변을 못 보거나 식사기간이 지나도 식사할 수 없도록 잡아 둠으로써 내재적 고통을 수반하게 하는 행위
- (3) 지각이나 태만한 경우 청소 당번의 횟수를 증가하는 것은 상관없으나 부당한 차별이나 혹사를 시키는 행위
- (4) 도난 사고 시 그 학생이나 증인을 방과후에 심문하는 것은 상관없으나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하는 행위
- (5) 수업시간 중 태만하거나 떠들었다고 해서 교실 밖으로 나가게 하여 수업을 받지 못하게 하는 행위
- (6) 물건을 훔치거나 부숴 버리는 경우, 향후 그 행동의 재발을 억제하기 위하여 골탕을 먹일 생각으로 장시간 남겨놓는 행위
- (7) 고의적으로 필요이상 정신적으로 불안감, 긴장감, 초조감을 주는 행위를 들 수 있다.

2. 체벌에 대한 법적 근거

가. 초·중등교육법에서도 징계에 관하여 기술하고 있으나, 체벌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20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31조 등이 학생의 징계에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다.

나. 초·중등교육법 제18조

학생의 징계에 관해 언급하고 있는 교육법조문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이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는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할 때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을 퇴학시킬 수 없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학생 또는 학부

모에게 의견지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서의 학생 징계란 각 학교에서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에게 과하는 제재를 말하며 징계에는 사실행위로서 행하는 징계로서 피교육자인 학생에게 몸과 마음의 양면에 고통을 줌으로써 교육의 능률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으로 학생을 훈계하기 위하여 야단치는 등의 행위와 법적 효력을 지니는 징계로서 재학하는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상실하게 되어, 학교시설의 사용권이 없어지고 일정 기간동안 등교를 못하게 하는 징계로서 정학 및 퇴학 등이 있다.

을 포함한다. 정학이란 학생의 학교 시설 이용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징계처분으로 ①유기정학 및 ②무기정학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구체적인 처분의 내용인 기간을 교장이 일정한 절차에 따라 정한다. 퇴학이란 학생에 대하여 학생으로서의 신분관계를 소멸시키는 처분으로서 이 퇴학처분은 학생을 학교(영조물)의 이용관계로부터 영구히 제거시키는 것이다. 근신이란 잘못된 것에 대하여 뉘우치고 일정한 기간 회개하는 처분으로 단순한 교실 내부에서의 사실행위로서의 징계와는 다르며 학생의 근본적인 권리에 대하여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보면 퇴학 및 정학과는 법적 효과라는 면에서 다르다.

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1) 징계의 종류

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퇴학처분

(2) 징계의 실시방법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학생 징계에 대한 교육감의 의무

교육감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교육이수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학생 체벌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하는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이 조항에서도 교사의 학생에 대한 체벌의 허용 여부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3. 체벌의 실태 및 문제점

가. 체벌을 일종의 교육방법으로 사용한다면 교육적 성격을 가져야 하며 체벌을 함으로써 문제행동이 제지되거나 개선될 것이라는 합리적 예상에 근거해야 하며 교사가 개인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보복적인 감정에서 이루어지는 체벌은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교육현장에서는 체벌이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최초의 수단으로서 또한 교육적 목적이 아니라 교사의 권위를 지키거나 학생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행하여지는 경우가 있어 문제되고 있다.

체벌과 관련된 판례들을 살펴보면 교사가 체벌을 교육권 행사가 아닌 학생에 대한 지배권 행사로 인식하면서 나타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상해의 결과까지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4.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의 퇴학처분의 요건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외의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2. 정당한 이유없이 결석이 잦은 자
3. 기타 학칙에 위반한 자

5. 퇴학처분 시 교장이 취해야 할 조치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6. 퇴학 조치된 자의 재심청구 등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의2 (퇴학 조치된 자의 재심청구 등)

①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법 제18조의3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이하 "징계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2. 피청구인
3. 퇴학조치가 있음을 안 날
4. 청구의 취지 및 이유

②징계조정위원회는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에게 심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징계조정위원회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청구인, 피청구인 또는 관련 교원 등을 징계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징계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가 등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징계조정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⑥징계조정위원회는 재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서의 정본을 청구인 및 피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3. 퇴학조치의 원인
4. 결정내용
5. 결정의 이유
6. 결정한 날짜

7. 징계조정위원회의 조직 등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의3 (징계조정위원회의 조직 등)

- ① 징계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징계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 및 제31조의4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교육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장학관, 교육연구관, 장학사, 교육연구사 또는 교육 경력이 15년 이상인 중등 교원 중 2명
 2. 해당 지역 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3.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4.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있는 자
 5. 교육감 관할 구역 안의 학교 학부모 또는 교육 관련 비영리민간단체 대표
 6. 청소년 관련 단체나 청소년 상담기관의 상담전문가 또는 의료기관의 정신과 의사
-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④ 징계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 및 제31조의4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

8. 징계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의4 (징계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개최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징계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징계조정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도 교육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서 제척된다.
 1. 퇴학 조치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해당 퇴학 조치에 관여한 경우
- ⑥ 청구인은 위원이 불공정한 결정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징계조정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⑦위원이 제5항 또는 제6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건의 심사·결정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⑧회의에 출석한 위원,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이 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정리하기

초·중등교육법 제18조는 학생 징계의 주체, 요건, 근거, 그리고 적법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학생 징계의 주체는 학교의 장이다.

학생징계의 요건은 교육상 필요이며, 학생 징계의 근거는 법령이나 학칙이다. 학생 징계의 적법절차는 학생 징계의 공정성 보장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의하면 학생 징계의 적법절차는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기회의 진술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밖에도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서는 학생에 대해 징계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는데 여기에는 ①학교 내의 봉사, ②사회봉사 그리고 ③특별교육이수 등이 포함된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서는 의무교육 과정에 있는 학생에 대해서는 퇴학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의무교육 단계는 국가에 의해 교육이 강제되기 때문이다.

■ 평가하기

문제 1.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상 학교의 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학생에 대하여 행할 수 있는 학생 징계의 종류가 아닌 것은?

- (1) 학교내의 봉사
- (2) 사회봉사
- (3) 무기정학
- (4) 퇴학처분

해설 : 정답(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에는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퇴학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 2. 초·중등교육법시행령상 퇴학 조치된 자의 재심청구와 관련한 내용 중 틀린 것은 ?

- (1) 징계조정위원회는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에게 심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 (2) 징계조정위원회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청구인, 피청구인 또는 관련 교원 등을 징계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3) 징계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가 등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거나 서

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4) 징계조정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해설 : 정답 (4) 징계조정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문제 3. 학생징계와 관련하여 판례의 태도와 다른 것은?

(1) 고등학교졸업이 대학입학자격이나 학력인정으로서의 의미밖에 없다고 할 수 없다.

(2)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에 합격하였다 하여 고등학교 학생으로서의 신분과 명예가 회복될 수 없는 것이니 퇴학처분을 받은 자로서는 퇴학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할 소송상의 이익이 있다.

(3) 학칙시행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정한다고 규정한 학칙의 부칙에 따라 학교장이 학생징계에 관하여 규정한 선도규정이, 무기정학 이상의 중징계에 관하여 그 절차와 사유를 특히 엄격하게 정함으로써 신중과 공정을 기하고 학생의 신분을 보장할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다.

(4) 징계권자인 학교장은 학칙의 부칙에 따라 학교장이 학생징계에 관하여 규정한 선도규정의 절차에 기속되지 않으므로 이를 어기고 한 징계처분도 정당하다.

해설 : 정답 (4)

학칙시행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정한다고 규정한 학칙의 부칙에 따라 학교장이 학생징계에 관하여 규정한 선도규정이, 무기정학 이상의 중징계에 관하여 그 절차와 사유를 특히 엄격하게 정함으로써 신중과 공정을 기하고 학생의 신분을 보장할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고 학생이나 교직원들은 위 절차에 의하여 징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신뢰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징계권자인 학교장도 이 절차에 기속되어 이를 어기고 한 징계처분은 위법하다.